

금남로에서



채 희 중
논설위원

정치가 지금처럼 생활의 중심을 차지한 적이 있었던가? 과거 아무리 친하거나 부모·자식 사이여도 정치 얘기는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정치는 거북한, 그 자체였다. 정치에 대한 거부감은 외면으로, 나아가 혐오를 넘어 무관심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무관심의 결과는 끔찍함을 넘어 저주에 가까웠다. 온 국민은 300명이 넘는 승객을 실은 세월호가 아무런 조치 없이 수장되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명언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다.

무능한 정부는 급기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수치심이라

적폐 청산 성공하려면

는 비수를 박았다. 참다못한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다. 보다 못한 국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는데 오는 9일이 바로 그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 권력 범죄 뿌리 뽑아야

국민의 정치 ‘무관심병’이 도진 것일까?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지만 야당과 보수 진영은 정치 보복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서서히 한편에선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틀(프레임)이 형성되고, 벌써 검찰 수사에 대한 피로도 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팀 운영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이 수사를 통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국가 권력은 문화 예술인 뒤통무나니 돈과, 청와대는 국가 안보에 쓸 국정원의 은이나 뜯는 여처구니없는 시스템이 과연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 안보를 책임질 군과 국정원을 동원해 거꾸로 국민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권력 군화기에 사용했으니.

그리고도 이마저 정치 보복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댓글 공작

과 같은 선거 개입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국가 기관이 여론 조작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쿠데타나 마찬가지이다.

‘청산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한다. YS가 대통령 재임 맡기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던 DJ의 건의로 5·18학살 혐의와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은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가 그 본보기다. 사면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전두환은 5·18을 폭동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희생이라며 법치주의마저 부정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아시아 민주주의 운동사의 전형으로 꼽히는 5·18항쟁은 극우 세력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폄해를 당하고 있다. 상당수 극우 세력은 아직도 5·18을 북한 사주를 받은 폭동으로 주장한다. 역사의 처벌을 포기한 탓에 진실과 정의가 기를 펴지 못하고, 결국 왜곡까지 당하는 사태에 몰린 것이다.

단죄 없는 역사는 반복된다

단죄 없는 역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무한 반복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감정풀이’라며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탄핵을 부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여전하다. 과거 정리 없이 그때그때 현실과 타협한 대가로 우리는 또다시 적폐 청산이라는 ‘시시포스의 바위’를 산꼭대기에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있었다.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을 벗고 성공하려면 미래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폐의 기준을 명확히 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크든 작든, 그것이 실수였든 관행이었든, 과거 범죄는 검·경에 맡기면 된다. 정부 차원의 적폐 청산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조직적 반민주적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임기 이후 자신들도 청산의 대상이 되겠다는 각오 아래 진행돼야 한다. 이번에만말로 완전한 적폐 청산을 이룰지 아니면 정치 보복에 그치고 말지는, 세월호 참사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社 說

AI로 폐쇄된 순천만 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순천만은 연간 500~600만 명이 찾는 단일 구역으로서는 국내 최대 관광 객 수를 자랑하는 명소이다. 방문객이 많은 만큼 관광 수입도 만만치 않아 지역 경제를 이끄는 구심체가 순천만 습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처럼 호남 지역 최대 관광지인 순천만 습지가 최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폐쇄된 지 보름을 넘기고 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폐쇄로 예전에는 AI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이었으나 올해는 고병원성 확진에 따른 것이다. 폐쇄 기간은 과거 50일 정도에서 이번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순천만 일대 상가는 적막이 감돌고 있다. 주민들도 불안을 호소한다. 지역민들은 이번 폐쇄가 겨울철 불황에 그치지 않고, 순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가운데 관광 산업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최근 둘러본 순천만 습지는 폐쇄된 지 2주일이 지

나면서 식당과 카페·펜션 등 100여 상가들이 개점휴업 상태다. 휴업을 알리는 문구를 내걸고 문을 닫은 곳도 상당수다.

상가 주민들은 순천만 습지는 겨울철이 주 영업 시기인 만큼 피해가 크다고 하며 매년 폐쇄할 정도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고병원성 확진이라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난 두 차례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AI로 인한 예방적 폐쇄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매년 겨울철이면 폐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AI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순천만 폐쇄는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순천시와 전남도는 AI의 차단을 위해 폐쇄가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파악, 합리적 지원책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 폭력 재심 온정주의로 흘러선 안 된다

광주 지역 초·중·고교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의 적절성을 다시 따지는 ‘학교 폭력 재심기구’의 가해 학생에 대한 이의 신청 인용률이 피해 학생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기구가 가해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하면 광역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처벌이 과하다고 판단한 가해 학생은 시·도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게 돼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재심 기구에 접수된 가해자의 재심 청구는 62건으로 이중 35.5%(22건)가 인용됐고 64.5%(40건)는 기각됐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 56건 가운데 16.1%(9건)가 인용됐고 83.9%(47건)는 기각됐다. 인용률로 따지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두

배를 넘는다.

이처럼 두 재심 기구의 인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되레 엄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들의 경우 징계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상급 학교 진학에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는 데다 인용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추세다. 하지만 가해자 편에 선 결정이 자주 나오면서 자칫 학교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보복성 폭력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 폭력은 범죄 행위다.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이 이어져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심사에서 지나친 온정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이원화된 재심기구를 단일화해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하겠다.

은편칼럼



옥 영 석
농협하나로유통 팀장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변변한 여행이라곤 해본 적 없는 아내가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스위스란다. 학창시절부터 벽에 걸린 알프스의 사진을 보며 막연히 동경해 왔더니 언젠가 꼭 같이 가보아야지 생각해 왔지만, 사나흘 만에 다녀올 거리도 아닌데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곳이다.

만년설에 뒤덮인 유럽의 지붕, 스파와 스키, 하이킹을 즐길 수 있고 동화 속 하이드가 손짓할 듯한 알프스. 순백의 눈위에 펼쳐진 목가적 풍경 속에는 멀리 눈 덮인 산과 드넓은 초지, 야트막한 울타리 속에서 풀을 뜯는 얼룩빼기 젖소, 빨간 지붕의 그림 같은 마을이며 장가에 놓인 조그만 화분들, 사진작가나 영화감독이 아니라도 누구나 연상해볼 수 있는 이 풍경은

알프스가 아름다운 이유

사실 스위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스위스 연방헌법에서는 국민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본 의무를 식량 공급, 천연자원 보존, 농촌 경관 유지, 인구 분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인구 분산 정책을 추구하지만 스위스는 농업·농촌을 통해 인구 분산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이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이므로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 체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가 직접 지불제다.

이는 식량 안보와 경관 보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토양 보호와 농약 사용의 제한, 운작과 동물 보호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78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농가당 평균 수령액은 6000여만원, 배우자나 부모가 농업에 같이 종사한다면 배 가까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지불제 예산이 농업 예산의 80%를 넘는다.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도시민들이 불평하지 않는 것은 알프스의 목가적 풍경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농업인들이며, 그들이 관광 스위스를 유지시켜주는 주체라는 믿음 때문이다.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도 우

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알프스 산맥은 보기에 좋아도 경사가 심한 산악인데다 빙하로 뒤덮여,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평균 경지면적이 적고 불리했다.

시장 개방에 농업인 수는 급감하고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면서, 그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알프스의 경관을 유지해오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눈 덮인 알프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빨간 지붕 농촌 마을과 목초지에서 뛰노는 목동과 소떼가 없다면, 관광객이 줄어 들고 경제마저 어려워진다는 것을 체감하고서야 농업 보호를 위한 헌법 조문 반영에 나선 것이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국가는 비단 스위스만이 아니다.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농업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은 농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타 산업 부문과의 균형 발전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자 협동조합과 농업 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마케팅과 판매 지원, 위험 보상을 위한 지원 제공 등을 열거하여 농업인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농업의 서명운동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시작한지 30일 만에 이뤄낸 성과이니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농업인과 농민 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고 학생, 상인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참여했다니,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다행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헌법 조문 초안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조문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도 경자유전의 원칙과 국가의 농어업·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선언적 의미의 공익적 기능 추가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편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만큼의 지원과 그 보상에 합당한 의무를 명시할 수 있어야 농업·농촌은 물론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췌록 30년 만에 다듬어지는 헌법 개정안이 100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세계가 참고할 금과옥조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해본다.

기 고

신안 해저유물, 지역에 상설 전시해야



김 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여기가 다 있네요. 아니 왜 발견된 섬에는 아무 것도 없고 여기가 있네요.” 여행객들이 증도 바다에서 발굴한 신안 해저유물을 전시하는 국립해양문화원 구소 전시실에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신안선과 그 보물들’이라는 주제로, ‘신안 해저유물 40년 만의 귀향’ 부제로 전시를 하고 있다.

1323년 여름,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이 고려 남쪽 바다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700여 년이 지난 1975년 8월, 신안군 증도 섬마을 어부 그물에 중국도자기 여섯 점이 걸려 올라오면서 70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에

전시된 유물도 전시기간이 끝나면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돌려줘야 합니다. 잠시 빌려왔을 뿐이에요’라며 해설사가 여행객들에게 말을 이었다. 오전에 증도에 다녀온 여행객들이다. 그나마 올해 말까지 신안해저유물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니 다행이다. 지난 여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 것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마저도 40년 만이었다.

그 무역선에는 중국도자기 2만6000여 점, 금속공예품, 석제품, 향신료, 한약재 등 총 2만6000여 점이 실려 있었다. 화물칸 아래쪽에는 동남아시아 고급향나무 1000여 점, 중국 동전 800만 개도 실려 있었다. 역사상 최대의 보물선이었다. 증도 앞 바다 갯벌에 묻힌 고선박 무역선을 ‘신안선’이라 불렀다.

여행객들은 현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대신에 ‘신안해저유물기념비’만 보았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신안 해저유물의 발굴은 우리나라 수중 문화재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증도 앞 바다에 발견된 유물은 지금까지 발굴한 수중유물 중 최대지만 문화재 발굴사에

서도 매우 중요하다.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전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이어 ‘국립해양유물보전처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발전했다.

하지만, 정자 증도바다에서 발굴한 수중유물은 선박과 부피가 큰 ‘자단포’만 목포에 있는 해양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전시할 뿐 도자기, 공예품, 동전 등 대부분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었다. 그래서 해설사의 말처럼 이달 말 전시가 끝나면 전시 유물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려줘야 한다. ‘40년만의 귀향’이 끝나고 다시 수장고로 옮겨져야 한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수중문화재는 발굴 현장이나 근처에 상설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지어 전시와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와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당시 법적으로 서울에 있는 박물관이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충청도 태안 마도와 담양읍 등에서 발견된 유물도 모두 신진도에 만들어지는

‘서해수중유물전시관’에 보관 전시될 계획이다. 태안군은 해저유물을 관광기념품 등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늦었지만 신안 해저유물도 마땅히 현지에 보관 전시해야 한다. 보관 시설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한다. 매장 문화재도 그렇지만 수중 문화재는 특히 현장이 중요하다. 그 양이 대단하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만들어 신안 해저유물전시관으로 개관을 해도 손색이 없다. 분권은 행정과 정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에 집중된 문화재도 해당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 지역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 복지만 아니라 그곳을 찾는 여행객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늦어서는 안 된다. 700여년 만에 빛을 본 신안 해저유물이, 40년 만에 귀향한 유물이 다시 수장고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년이면 전라도 정도 천년이다. 이를 기념해 문재인 정부와 관련 부처의 대응적인 결정을 간곡하게 요구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가상 화폐 열풍

가상 화폐의 원조인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일본인이 개발했다. 첫 거래가 이뤄진 것은 한참 후다.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라스즐로 헨예츠가 인터넷에 ‘피자 두 판 값을 내주면 비트코인 2만 개를 주겠다’는 글을 올리자 한 영국인이 주문을 넣었다. 영국인이 지불한 피자 값이 4만 원이었으니 비트코인 2만개의 가치는 당시 4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용 수수료가 20%나 되고 일정 기간 원금을 찾을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나방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20여 년 동안 주식 투자로 2억 원가량을 날린 한 선배도 요즘 가상 화폐에 솔깃해 있다. 자신의 친구가 가상화폐 거래 대형업체에 4000만 원을 투자해 하루 평균 1%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다. 운용 시스템을 몰으니 원금은 일정 기간 찾을 수 없지만 수익금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광주에서 이 대형업체에 9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전해졌다. 운

가상 화폐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을 걸 보면서 걱정이 앞섰다.

어제는 ‘오늘 같은 밤이면’이란 노래로 1990년대를 풍미한 가수 박정운이 연루된 2000억 원대 가상 화폐 사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가상 화폐가 미래 화폐인지 투기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17세기 네덜란드의 튜림버블이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때 집 한 채 가격이 몇억 원 튜림구근 한 개가 당시 거품이 꺼지자 양파 한 개 값으로 폭락했다지 않은가.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경 영 지원국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